

## 1)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일본 언론들의 선거에 관한 보도는 크게 보아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두 개의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수행된다. 「표현의 자유」가 언론 창달적인 규정이라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조항은 제한적인 규범으로써 작용한다. 현행 일본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제 21 조에 규정돼 있다. 제 21 조는 「집회·결사 및 언론·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열을 해서는 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13 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재산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으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부터 보면, 이것은 기본권 보장의 한 원칙으로서 누가, 무엇을, 언제, 누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말하려 해도 자유롭다는 의미인 것이다.

□ 서울대 정치학과

□ 경향신문 정치부장, 외신부장, 주일특파원, 논설위원 역임

□ 현재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그러므로 이 자유에는 각자 자기실현의 보장에 의해 각자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종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고, 주어, 모두 쉽게 이것들을 알고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의해, 사회전체가 향상돼 가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의 적극국가와 고도과학기술, 그리고 거대자본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대하고 효율성 좋은 정보수집·관리·유통수단이 발달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은 각자의 개인적 능력으로는 독자적으로 정확하고도 다량의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돼 있다. 여기에서 모든 국민에게 등등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가 자유롭고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의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격발달과 생활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고, 또 나라의 문명도 향상되며, 「바른 정치」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보도자유 불가결한 전제인 「취재의 자유」도 보장해준다. 그렇지만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전적으로 무절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인권의 자유와 공공의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남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남용의 우려를 막기 위한 유력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인 것이다. 프라이버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생활상의 비밀을 보호 받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인격의 평가에 관계가 있는 정보가 정당한 동기와 수단에 의해 공표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 하더라도 헌법은 그것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의 확립은 헌법 13 조에 대한 각급법원에서의 해석과 판례에 의해 점진적으로 구체화 돼 있다. 그 한 실례로 1964년 오오사카 고등법원은 데모행진 때에 경찰이 특정인의 얼굴사진을 찍으면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른바 초상권은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보장돼야 한다는 판례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결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령 어떤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당사자의 완전한 개인의 일이 아닌 경우, 즉 사회전체의 정당한 관심사인 때에는 그것은 공표돼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표본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로 좁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전국민의 대표로서, 국권의 최고기관의 일원으로 헌법상의 특권을 위임 받고 있고, 또 국가 및 전국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 인격의 평가에 관계가 있는 정보는 그 국회의원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게 돼 있다. 그 정보는 오히려 권력자의 지위를 좌우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권자인 전국민의 정당한 관심사로 돼 있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정보가 정당한 동기와 수단에 의해 공표됐을 경우에는, 가령 그것으로 국회의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 하더라도 헌법은 그것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민주주의사회를 운영해 가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은 공권력의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할런트 등은 모든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행위 등도 단순한 개인적인 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인은 스스로의 임무가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숭고한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한 그 언론인의 보도행위 또한 「숭고한 것」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취재 보도한 것이라면 공인의 프라이버시 보도는 당연한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법률의식이 선거보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또한 오늘날 일본언론의 일반적 양태이기도 하다. 그런 전제아래에서 1986년에 있는 7·6 중·참의원 동시선거와 1987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차기 총리대신의 선출을 모델로 하여 일본언론의 선거보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7·6 중·참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보도

양상중의원 재적 512석 중 304석이라는 창당 이래 최대의 승리를 집권 자민당에 안겨다 준 7·6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전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전달하는 신문보도 또한 인신공격적 요소를 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주로 정당 당수의 지방유세를 통해 빚어졌으며, 따라서 자연히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도전과 응수의 형식을 띠었다. 제 1야당인 사회당의 이시바시 위원장은 나카소네 총리가 권력주의적 수법으로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거짓말쟁이라고 나카소네 총리에게 비난의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당의 다른 입후보자들도 당수의 이런 공격자세를 본받아 일본열도를 「불침항모」로 내세운 나카소네 총리의 방위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심지어 일부 후보자들은 나카소네 총리를 「혀를 두개 가진 비정하고 냉혈적인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맹격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신문들에 의해 그대로 보도되기 마련이었다. 야당의 맹공에 자민당 후보들은 팔짱을 끼고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무능을 공박하고 나왔다. 나카소네 총리의 부인은 남편을 대신한 지방지원연설을 통해 「나카소네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동시선거를 감행한 것은 사리사욕 에서가 아니라 일본인을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단행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자민당 후보자들은 사회당을 가리켜 「똑바른 정책도 내걸지 못하고 혈뜯기만 하는 정책부재의 정당」이라고 매도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신공격은 나카소네 총리의 영어실력에까지 비화하여 사회당 후보들은 「그의 영어실력이라는 게 형편없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등 겨우 유치원생의 영어밖에 되지 못한다.」고 꼬집고 나왔다. 심지어 어떤 야당후보는 선진국 7개국 정상회담에서 나카소네 총리가 늘 레이건 미대통령 옆에 서 있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놓고 「레이건 옆에 쫓르르 달려가 사진이나 찍는 주제에…」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나카소네 총리도 이 말에는 참지 못하겠던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유치원생이며, 사회당이나 공산당은 요리조리 핑계만 대면 평화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뉴 사회당은 커녕 울드(늙아 빠진) 사회당이니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런 말의 공방은 신문이나 TV의 좋은 보도소재가 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일본 신문들은 그런 현상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7·6 총선에서는 사회당을 중심으로 민사당과 공명당 등의 야당이 연합전선을 펴 자민당 후보들의 표를 깎아 내리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게 특징의 하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자민당의 가네 마루(金丸信) 간사장은 「야당의 연합이라는 게 닭싸움용의 사나운 닭과 집 닭, 그리고 고양이를 함께 끌어 모은 꼴이 될 것이다. 이 난국에 연합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고 비아냥거렸다. 이런 말이 신문보도의 소재가 됐음은 물론이었다. 선거에 관한 보도에 그런 말의 성찬만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해설기자의 중간 중간에 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소재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선거가 공고되자마자 각 신문들은 각 정당의 당수가 첫 선거에서 무슨 말을 먼저 했는지를 중점을 두어 보도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국지로 꼽히고 있는 아사히 신문은 참의원선거 공고일인 6월 18일자 석간기사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7개 원내 정당의 당수가 첫 가두 연설에서 밝힌 정책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똑 같은 분량으로 소개했다. 10석 이하의 의석을 가진 사민연 당수의 발언도 집권정당인 자민당의 나카소네 총리의 그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보도했다. 그 보도를 보면 나카소네 총리의 발언은 『21 세기에의 준비시기』라는 제목으로 요약하고 있고, 이시바시 사회당 당수의 연설은 『총리의 거짓말 용서할 수 없다』의 제목 아래 옮기고 있다. 또 다케이리 공명당 당수의 주장은 『군비 확장의 자민당에 철퇴를』이라는 선동적인 제목으로 알리고 있고, 민사당 당수의 첫 유세는 『고도복지 실현을 꾀한다』는 제목 아래 소개했다. 그밖에도 공산당의 그것은 『파쇼에 심판을…』, 신 자유구락부의 그것은 『군축으로 경제활성화를』, 사민연의 그것은 『정치·정책의 전환기』라는 제목을 각각 붙여 전달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권력구조라는 점을 충분히 의식한 공평한 지면할애 태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신문들은 각 입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정치면이나 사회면에 소개하지 않고 지방면에서 다루었다. 아사히신문의 경우 동경도의 참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50 명을 6월 19일자 조간 20면(동경도판)에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약력을 똑같은 분량으로 보도하는 공평성을 견지했다. 그리고 21면에서는 격전을 벌이고 있는 9명의 관심을 끌고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역시 동일한 스페이스로 선거유세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외견상 차등을 주지 않고 있다. 중의원의원 입후보자의 보도는 참의원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그것보다 질량의 양면에서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었다. 권력의 추가 중의원에 더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각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참의원의원 후보자와 같이 정치 사회면에서 다루지 않고 역시 지방면에서 취급했다. 아사히 신문은 동경도의 경우, 11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선거구별로 나누어 하루에 2개 구 정도씩 나누어 몇 일간을 연속해 주요 후보자의 정견을

소개했다. 물론 동경도에 관련된 정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동경도에 고유한 특성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방면에서 쟁점별로 연재물을 설정, 후보자들의 주의주장을 비교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자료로 제공했다. 그런 반면 주로 정치면에서는 전국적인 정책적 관심사에 관해 쟁점별 연속물을 기획보도했다.

7·6 총선보도에서는 차기 총리후보자의 세대교체문제, 나카소네 총리가 집권공약으로 줄곧 내걸어온 전후 정치 총결산노선, 엔고불황대책, 방위비팽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분석하고 있는 게 특색이었다. 이들의 문제는 오늘날 일본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과 파벌간의 정책적 대결사항 이기도 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언론들은 선거가 종반전에 들어서자 거의 경쟁적으로 각 정당간의 예상확보의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예측했다. 그러나 7·6 총선에서는 어느 신문의 조사결과도 자민당이 304 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리라고는 전혀 알아 맞추지 못했다. 공영방송인 NHK의 거듭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도는 겨우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만큼 일본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고도로 향상돼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아무튼 7·6 총선의 경우를 보면 일본 신문들은 될 수 있는 한 공평원칙과 정책대결의 방향으로 선거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했다.

### 3) 1987년 후계총리선출에 대한 보도경향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보도와는 달리 후계 총리 선출에 관한 보도는 늘 일상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7·6 총선의 과정에서도 각 언론 매체들은 나카소네 총리의 후계를 노리고 있는 이른바 뉴 리더들의 활동에 더 많은 신경을 쏟은 인상이었다. 지금 일본에서 나카소네 총리의 후계를 의식하며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지도자들은 다케시따, 아베, 미야자와 씨 등 3명이다. 이들을 일본 매스컴에서 대표적인 뉴 리더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 신문들은 7·6 총선과정에서도 이들 3명의 뉴 리더들이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 자파 후보자들에 어떤 자원활동을 벌이고 있는가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고, 실제로 이곳은 7·6 총선전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의 특별한 관심사이기도 했다. 타케시따 · 아베 · 미야자와 씨 등 3명의 뉴 리더들은 「나카소네 이후」를 의식하여 자파 후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지원은 물론 조직동원에까지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자민당이 7·6 총선에서 공전의 대승을 거둔 것도 이들 3명의 뉴 리더들의 정력적인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선거결과분석에 관한 각 매스컴의 보도에서 공통적인 찬사로 나타났다. 그만큼 나카소네 총리의 후계를 노리는 뉴 리더들의 활동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비상한 국민적 관심사였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3명의 뉴 리더에 보도의 초점을 옮겼고, 이들의 합의에 따라 나카소네 총리의 임기를 1년 동안 더 연장해주는 결정이 나왔을 때 그들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나섰다 다케시따 씨는 총선후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다나까파를 실질적으로 계승, 다게시따파의 기치를 내걸었고, 아베 씨는 후쿠다 전 수상으로부터 파벌총수의 지휘봉을 선양 받아 아베파를 지도하게 됐다. 미야자와 씨 역시 스즈끼 전 수상에게서 파벌영도권을 인수받아 미야자와파를 출범시키는 등 정권도전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척시켰다. 일본 매스컴들은 이러한 3명의 정치 지도자들의 활약상에 보도의 초점을 집중시켜 정권의 향방을 점치는 데 부산했다. 물론 다나까파에서 소수나마 잔류파를 규합하여 독자의 파벌을 차린 니카이도 씨의 활동에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 매스컴들이 이같이 파벌 총수들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연중보도의 극성스러운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어느 파벌총수들도 독자의 힘으로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고, 다른 파벌영수와 연합전선을 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각 파벌들은 두개 파벌이 연합전선을 편다 하더라도 중·참 양원의 자민당 의석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제 3의 군소파벌을 또 끌어들여 3파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드디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돼 있다. 그 때문에 뉴 리더 3인들은 서로들의 눈치를 살피며 파벌연합의 소망스런 조합을 짜기에 암중모색의 지략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자 21세기의 일본을 이끌어 갈 자기 나름의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에 선보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현 자민당에는 뉴 리더 3인의 파벌 외에 나카소네파, 고오모파, 니카이도파 등을 포함한 6개 파벌이 병존해 있다. 그래서 3인의 뉴 리더 중 2명이 연합하더라도 다른 파벌의 도움이 없이는 정권을 잡을 수 없게끔 돼있다. 그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본 매스컴들은 파벌의 움직임과 나카소네 총리의 향배에 필사적인 추적취재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후계총리선출에 대한 보도는 파벌간의 연합형태를 소개하는 것을 기축으로 하여 거의 메꾸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의 정국에 관한 보도는 뉴 리더 3인의 동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특정 인물들의 활동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것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 4) 정치의 「고십」 화 보도의 지장

위와 같은 서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 언론들은 고십적인 정치기사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일본 매스컴들은 파벌정치의 폐해를 때때로 개탄하면서도 고십적인 기사에는 결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정치기사 특히 선거보도에 관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스트레이트 기사와 분석적 해설기사 또는 논설적인 해설기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경향의 연속선상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인들의 비정치적 스캔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한 정치인의 행위 중 큰 사회적 물의를 던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좀처럼 기사화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일본 매스컴들은 정치적 독직사건이나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의 집착력을 갖고 파고 든다. 다나까 전 총리의 뇌물 수수사건을 거의 10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그 상징적 실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 매스컴의 선거보도는 결국 정당간의 정책대결이나 정국의 흐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